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분야 Externship 프로그램개발

김 혜 정*

I. 들어가는 말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및 설립에 관한 문제가 지난 2005년 이후 사법개혁논의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지난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행보가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추진이 의미하는 바가 다양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종래의 법학교육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법조실무에 초점을 맞춘 법조인 양성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양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기본적 법조실무를 위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각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화된 전문화과정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대학들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가칭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함)에서도 역시 그러한 교육목표 내지 취지에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발맞추어 특성화방향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공익과 인권”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하고 있다.

II. 특성화 목표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과 인권’으로 특성화방향을 설정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학칙 제4조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을 연구하고 법률전문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목표로 추구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특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기본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인권의 전문화, 인권의 대중화, 인권의 세계화, 인권의 지역화 등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점을 두는 특성화방향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설정한 ‘인권’분야 특성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는 우선 제1단계로 특성화 목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방향 제시하고, 제2단계로 이러한 특성화 목표가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제3단계로 특성화 목표에 상응하는 실무연수과정 실시하고, 제4단계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인권 전문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체계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본다.²⁾

사실 지금까지 법조실무에서 인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법조인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양심 내지 소신에 더 비중을 두는 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활동영역은 소위 인권변호사로 호칭되는 몇몇 법조인들에 의해 다소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인권전문화 대상이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특히 다양한 공공영역의 위원회 활동 등에서도 인권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 보다도 국제적인 영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등장, 그에서 비롯한 다양한 국제인권관련 조약 등은 하루빨리 인권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하여 그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 역시 인권분야 전문법조인 양성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변화된 현재의 환경 속에서 인권 분야 특성화 목표가 성공을 거두려면, 특

2) 특성화 목표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 - 목표 및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 인권위 제1차 간담회 발표자료 (2007. 8. 24) 참조.

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표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교육과정에서 반영되고 산학(혹은 관학)실무연수프로그램 내지 졸업 후 활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정한 인권분야 교육을 전제로 하여 이른바 인권분야 Externship으로써 산(관)학 실무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구상해보도록 한다.³⁾

III.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인권분야 특성화 협력방안

1.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권분야 특성화 목표 내지 이념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관)학협력 교류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무(현장)교육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기본적인 관점 하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관련분야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기관 내지 단체를 생각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에 비록 여러 개의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시행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인권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인권분야 전문실무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교류프로그램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마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 중에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13조 제2항을 보면, “2.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인권교육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그 연장선상에서 인권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류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류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때그때 주요활동과 연계되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어 본격적으로 프

3) 인권분야 특성화를 위한 교과과정의 문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작업되는 영역이므로 본 글에서는 적절한 교과과정이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Externship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로그램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본다.

2.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 프로그램에

(1) 교류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기본원칙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 인권 특성화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기초 인권교과목과 세부적인 인권관련 전문교과목을 이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이론교육을 전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에 실무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규모 내지 방식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류프로그램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매해 36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⁴⁾ 그러나 구체적인 참여인원은 매해 프로그램 참여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진행은 국가인원위원회의 1회 수용가능 능력을 고려하여 36명을 1회에 수용하거나 혹은 차수를 나누어 12명 단위 3개조 내지 18명 단위 2개조 등의 시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프로그램은 예컨대 2학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며 그 기간은 4주 혹은 6주프로그램으로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4주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주일 정도의 이론교육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이론을 습득하고 3주부터 4주까지는 주요 지역사무소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6주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현장교육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주요 지역사무소에서의 현장교육기간을 1주씩 연장하는 것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무소에서의 현장실습은 각 지역사무소의 경우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서울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일정기간 투입하여 일정부분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4) 이러한 규모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하나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한상희 외 5인 공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 기준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6, 228면 이하 참조).

<표 1> 4주 교육 프로그램의 순서도 예시

	1조(12명 단위)	2조(12명 단위)	3조(12명 단위)
1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2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3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4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5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6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표 2> 6주 교육 프로그램의 순서도 예시

	1조(18명 단위)	2조(18명 단위)
1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2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3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이론교육(서울소재 국가인권위원회)
4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5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대구지소)
6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7주차		인권위 활동에 대한 현장실습으로 지역 현장실습(인권위 광주지소)

위의 <표 1> 혹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진행기간 역시 프로그램 참여인원수에 따른 차수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론교육

앞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구상해보면, 먼저 인권관련 업무의 실무적인 현장경험에 앞서 이를 시행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의 성격,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도,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과제의 의미 및 개요, 기타 실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론교육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인권분야의 일정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무를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론교육의 일정은 아래 <표 3>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1주 혹은 2주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으며, 만약 2주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 2주차에는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에 대한 논의 내지 실무관련 특강 등의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론교육의 예시

	월	화	수	목	금
오전	인권위의 전체 흐름도	침해구제 1 취지 및 방향	침해구제 3 취지 및 방향	조사업무실무	국제인권활동 취지 및 방향
오후	인권위의 기본활동방향	침해구제 2 취지 및 방향		상담업무실무	

(3) 현장교육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교류프로그램에서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현장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관련 업무(활동), 특히 침해구제문제와 관련한 현장조사업무는 교류프로그램 중 현장교육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본다.

진상조사업무의 보조 내지 진정사건에 대한 상담업무 등과 같은 실태방문조사에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조사인력의 보충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참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편 실무를 배우고, 또 다른 한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법조실무를 행할 때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현장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습득한 법률자문 내지 국제 인권단체와의 협약체결의 준비작업 등에의 참여를 통해 향후 국제기구에서 인권전문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비교육과정으로 충분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장교육은 1(멘토) 대 1(멘티) 혹은 1(멘토) 대 다수(멘티)의 팀을 이루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류프로그램의 경우, 1주차에 실시하는 이론교육에 대한 평가보다는 2주차부터 실시하게 될 현장교육(실무이론교육이 2주단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3주차부터 실시)을 통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주차부터 실시되는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각 지역 담당자(멘토)가 참여 학생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획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절대평가로 하고 그 등급은 상·중·하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분야의 실무수습의 평가와 통일적인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각 평가자 사이에 주관적인 평가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체적인 조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5) 예산

교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예산은 원칙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예컨대 조사출장비 등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언제라도 상호 협의 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국외기관과의 교류프로그램 개발필요성

이상에서 언급한 인권실무 관련 교류프로그램을 기초로 외국 인권관련기관에서의 교류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의 전문화, 인권의 대중화, 인권의 세계화, 인권의 지역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권분야 특성화 내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적인 인권기구에서의 우리의 전문인력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교류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외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법학전문대학원이 본격적으로 법조인양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동 기관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에게는 변호사라는 기본적인 자격요건과 함께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으로 그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권분야로 특성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국제인권기구, 국가기관 더 나아가 기업 등지에서 인권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법조인의 기본 소양으로써의 인권이 아닌 보다 전문성이 갖추어진 내용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그를 위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적절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본다.

부록 : MOU체결협약서안

인권교육에 관한 교류협약서

영남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인권교육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류 협약을 체결할 것을 확인한다.

제1조(협약내용) 영남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칭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무실습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인권교육 및 실무수습 시행
(연간 36명)
2. 인권교육 및 실무수습을 위한 상호 프로그램 개발
3. 상호 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정보교류
4. 인권 정보 및 간행물의 상호교류

제2조(상호협의) 제1조의 각호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상호존중) 파견기관의 구성원이 초청기관에 체재하는 동안 초청기관의 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제4조(효력발생 및 종료) 이 협약은 영남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